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31(일)	
		작 성 · 문 의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 정책관 이인호(Tel. 044-200-2121) 경제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 과장 송기진 / 서기관 조승희 (Tel. 044-200-2239)
엠바고	즉시 사용		

'국민안전 위해 테러방지법 조속통과 반드시 필요'

- 황교안 총리, 1.31(일) '공항 테러·보안 강화대책 관계장관회의' 개최
 - 인천공항 점검 후, "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"
 - "국민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,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"
 - 정부, 범부처 공항 보안강화 종합대책 조속 마련·시행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.31(일)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'공항 테러·보안 강화대책 관계장관회의'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에게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 등과 같은 보안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항 테러·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,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.
- 이날 회의는 황 총리가 어제(1.30, 토) 인천공항 현장을 점검 한 이후, 국가관문인 공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, 국회의 입법협조도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되었다.
- 당초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예정되어 있었으나,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로 격상된 것이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에서 공항 테러 대책과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보고·논의하였다.

- 황 총리는 “정부는 시설·인력 등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여,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, 공항 종사자들의 근무태세도 확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”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,
- 국회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‘테러방지법’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달라’고 강조했다

□ 또한, 이번 회의에서 보고·논의된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과 같다.

- (시설보안 강화) 공항 주요 출입문과 입국심사대 등에 무단통과 시경보시스템 도입, 강제통과 가능 여부 등 자동출입국심사대 전수조사(106대) 실시 등
- (보안인력 기강확립 및 확충) 보안사고 발생업체 퇴출, 근무수칙 등 매뉴얼 재정비, 보안인력 근무기강 엄정확립
- (테러대응 체계 개선) 관계기관(법무부, 국토부, 항공사)간 정보공유 강화, 불법입국 위험인물 선별관리 강화, 사이버 테러대응 전문요원 양성, 출입국 심사장 전체 보안관리 전담팀 창설 검토

□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인력·정보공유·대응체계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‘법부처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’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·시행해 나갈 계획이다

* 참석: · 법무부 · 국방부 · 행자부 · 국토부 · 안전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국정원 2차장, 관세청장, 경찰청 차장, 국무1·2차장

※ 별첨 : 주요대책 방향

주요대책 방향

<보안강화 대책>

□ 시설보안 강화

① 시설물 하자 시정

- 중국인 및 베트남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보안검색 구역 출입문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하자 즉시 시정

* 보안검색장 문은 이중 잠금조치, 경첩을 철심(15cm)·용접으로 고정, 출국심사장 문은 운영 종료시간에 잠금조치

② 노후시설 최신화 및 첨단장비 도입

-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주요 출입문에 무단 통과 시 경보시스템 도입
- 지능형 영상감시*, CCTV 교체 등 공항경비보안시스템을 선진화

* 녹화된 영상에 특정 조건(옷, 특징 등)을 입력하여 신속히 검색

③ 자동출입국심사대 전수조사 및 문제점 보완

- 강제통과 가능여부 등을 전수조사(106대), 문제점 보완

□ 보안인력 근무감독 강화

- 실효적 감독체계 마련, 처벌기준 엄격 적용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

* 경비인력에 대한 별도 교육을 통해 업무 매뉴얼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

- 중대 보안사고 발생업체는 퇴출되도록 강력한 관리방안 마련

* 보안업무 해태 시 책임자 문책과 계약 해지 등

□ 테러 대응체계 강화

① 불법입국 등 위험인물 관리체계 마련

- 승객정보를 사전분석, '불법입국 고위험 환승객'을 선별하여 항공사 관계자가 환승장까지 직접 안내하는 방안 추진

② 보안인력 역량 및 전문성 강화

- 출입국심사장 전체 '보안관리 전담팀' 창설 추진

- 실전형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,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매뉴얼 마련

<테러 대책>

□ 테러 위협인물 입국 차단 등 예방체계 구축

- 국제 테러분자 명단 지속 입수, 관계부처에 지원·입국 차단
- 국내 테러 위협인물 위해행위 사전 차단
- 대테러요원 등 증원, 전국 테러취약시설 면밀 점검 및 관계 기관 합동훈련 확대

□ 대테러 인력 전문성 및 역량 제고

- 신종 사제폭발물 검색기법 지원, 경비·보안검색 역량 제고
- 테러유형별 유관기관 실전훈련 실시, 공조강화 및 신속 대처
- 소경찰부대를 대테러 전담부대, 긴급진압부대, 후속지원 부대로 재편, 테러 초기에 즉시 대응 가능토록 전문화

□ 대테러 인력 및 장비 보강

- 전신검색기·이동물체 탐지 CCTV 등 첨단 과학장비 추가 도입
- 공항건물 일반구역 출입구에 X-Ray 장비 설치, 출입자 휴대품 검색
- 방탄복·방탄헬멧 등 기본장비 보강 및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 신종테러 대응장비 확충 추진

□ 국내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

- 외국 정보기관과 협조, 국제 테러분자 잠입·위협정보 입수·전파
- '외로운 늑대형' 테러 위협인물 파악
- 인터넷상 테러 선전·선동, 폭발물 제조업 유포 사이트 모니터링